

이재명, 기본사회 5대 공약 발표

이재명, 출생 기본소득·기본주택·대학 무상교육 등 제안 “국민의 기본 삶 보장 가능한 역량 갖춰...국가 책임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4·10 총선을 앞두고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며 기본사회 5대 공약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충주시 김경욱 후보 사무소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충북 합동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기본사회 5대 정책으로 국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기본사회 5대 공약으로 ▲출생 기본소득 ▲기본주택 ▲대학 무상교육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어르신 하루 한 기 지원 등을 제시했다.

출생 기본소득은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고 자녀가 성인으로 자립하기 까지 기반을 마련

해준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확대해 17세까지 자녀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펀드계좌를 적립해 1억원의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하면 10년 만기 1억원의 기본대출을 보장하고, 출산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순차적으로 감면해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기본주택은 신혼부부 출발을 지원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월세 1만원 임대주택 확대하고, 100만원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학 무상교육은 청년들에게 교육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 4년제 사립대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 식사 지원을 통해 소득이 줄어드는 노후 지원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정치는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도 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삶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우리의 경제력과 국가 역량이 이제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정도는 됐다”며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 국가 책임을 강화해서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든든한 토대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회의에서 정권심판론 강조하며 충북 유권자에게 총선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책무를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 배반한 권력은 국민의 엄청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그것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기본 이념이자 헌정질서의 근간”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년간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다”며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다. 하지만 돌아온 건 민생경제 몰락, 민주주의 파괴, 미래의 실종, 평화의 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권 심판에만 머무르지 않고 모든 국민의 더 나은 삶,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겠다”며 “윤석열 정권이 파란 낸 민생을 다시 살리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재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면기자

광주 북구의회 상임위원회, 현장활동



신안동 소재의 태봉어린이집은 1983년 건축되어 노후화가 심하고 어린이공원 내에 위치해 현행법상 현 위치의 신축이 불가하여 새로운 지역으로의 신축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일부지역 편중 설치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에서 하나금융그룹의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양산동 4번지로의 이전 신축이 결정되었다.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이 부족한 양산동 지역 학부모들께서는 태봉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며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철저한 관리와 감독으로 예정된 일정에 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전도시위원회(위원장 주순일)는 지난 15일 신안동 커뮤니티센터와 임동 버들마루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였다.

지역 주민의 활동 공간 제공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신안동 커뮤니티센터와 임동 버들마루는 마을 관리의 질적제고 및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 등 주민 주도의 운영을 목적으로 민간 위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도시위원회 위원들은 “주민주도 운영 목적의 민간 위탁 취지는 좋으나 위탁 후 운영에 대한 관리 및 점검을 소홀히 해서 안된다”며 “민간위탁 협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주민들이 이 침체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슬비기자

한숙경 전남도의원 “기업의 RE100 이행 위해 전남도 지원 필요”

컨트롤타워 역할의 RE100 추진단 설치 제안

전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최근 녹색에너지연구원 업무보고에서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기반 전력 사용) 이행’을 위해 기초지자체에 대한 전남도의 지원을 강조했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환경문제로 그치지 않고 시장과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이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으로 전 세계가 탄소중립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 의원은 “기업의 RE100 이행에 있어 부지

발굴, 주민수용성 등 각종 제약조건 해소를 위한 기초지자체와 전남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초지자체는 RE100에 대한 인식이 높은 편이나 기업 특성에 적합한 재생에너지 공급 및 태양광 설치사업 등에 대한 대응 역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숙경 의원은 “기초지자체 지원을 위한 전남도 RE100 컨트롤타워 역할의 RE100 추진단 설치를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전남도는 기업의 RE100 이행의 장



에요인 해소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기초지자체 조력자로서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오늘부터 4·10총선 선거운동 시작

다음달 9일까지 공식 시작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이 2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공식 시작된다. 유권자의 경우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적시 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유 행위에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3월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인쇄물·시설물 이용, 공개장소 연설 및 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선거운

동을 할 수 있다.

우선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 중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으므로 이미 게시된 정당 현수막을 이날까지 철거해야 한다.

서선욱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